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심장' 대구시의 동성로 거리에서 열린 집회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3일 울산 남구신정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3일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가 열린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국민참여 진짜 개혁” vs 김문수 “개혁 원점 재검토”

대선후보들 공약 점검

보건의료

제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윤석열 정부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였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국민과 의대생, 현장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를 토대로 한 ‘진짜 의료개혁’을 기

치로 내걸었다. 이 후보의 의료개혁은 지역의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신설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료개혁 추진과 달리 국민참여를 보장해 의료 공공성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남 한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하나로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이 “지역의사·의대 신설” 핵심 전남 국립의대 신설 속도 기대 김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이준석 “보건부 별도분리 개편”

했기 때문에, 병상이나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고려하는 속에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지 봐야 한다”며 이 후보의 증원 등 의료개혁 방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과정에서 추진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약속했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를 해결하고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 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아울러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의 공약이 가시화되면 무산 위기에 몰렸던 전남 국립의대 신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공·사립 통틀어 의대가 단 한 곳도 없는 의료 불모지로 꼽힌다. 다만, 공공의대의 경우 의사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어 향후 설립 과정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환자 단체 등 비의료인의 의료개혁 개입도 대체로 의사들이 꺼리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시스템 개선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의대생과 전문가를 앞세웠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입장문에서도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고 했었다.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화,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임신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도 김 후보 보건 공약의 핵심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 분리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건부 분리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이번 대선 정책 요구안에도 포함됐다. 정근산 기자

이재명 “석탄발전 폐쇄” 김문수 “원전 차질없이”

세계적 화두 기후위기 후보들 대응책은 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기후위기 속에 진행되는 만큼 후보들도 제각각 ‘기후위기 대응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눈에 띄는 공약은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다. 2036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59기가운데 28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 정부 계획인데 이보다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은 목표를 수립하겠다”면서 세부적으로 “2030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는 원론만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란 공약에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관련 부처와의 ‘기후재난 통합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 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35 NDC’ 목표치(70% 감축)를 공약에 명시하는 한편 2035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60%를 달성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를 중단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제2차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토론 주제로 ‘기후위기’를 포함했다. 각 후보가 내놓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표심을 가르는 주요 요소가 됐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후보 직속위원회 본격 활동

국토공간위 등 정책 마련 착수

6·3대선을 3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의 위원회들이 속속 활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진 의원부터 초선 의원, 원외 인사들까지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깊이 있게 구성해보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공간혁신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경남지사를 지내며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과 5선의

김태년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출범식에는 민형배(광주·광산을)·안도걸(광주·동남을)·조인철(광주·서구갑)·조계원(여수을) 등이 광주·전남 의원들도 함께했다. 위원회는 이 후보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5급 3특 균형 발전 공약’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해당 공약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을 기반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제주·강원·전북을 특별자치도로 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같은 날 출범한 ‘노동존중선대위’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주영 의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현장 중심의 노동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장, 김 의원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수 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스마트국방위원회’는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주도해 미래형 국방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AI강국위원회’는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인 이재성 부산시장위원장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미래위원회’는 4선의 서영교 의원 주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 서울=김현수 기자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